

중국 “가전하향(家电下乡)” 정책의 확대 시행과 중국 내 반응

1. 개요

- 중국정부는 지속 발전, 농촌지역 내수 확대, 가전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가전하향(家电下乡) 정책을 2009년 2월 1일부터 4년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함.
- 가전하향 정책은 농민이 지정된 가전제품 구매 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혜농(惠农)정책으로 지난 2007년 12월부터 3개 성(산둥, 허난, 쓰촨)에서 시범적으로 시행
- 가전하향 정책 시행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.

<표 1> 가전하향 정책의 변천 과정

일시	내 용
2007. 12. 1	- 재정부와 상무부, 3개 성(산둥, 허난, 쓰촨)을 가전하향 시범 지역으로 선정 - 이를 규범화하기 위해 《가전하향보조금관리잠정방법》을 제정, 가전하향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80%와 20%를 부담
2008. 1. 17	- 쓰촨성의 가전하향 시범 시행 정식 시행(2008.5.31 종료)
2008. 1. 21	- 상무부와 재정부, “가전하향 지정상품 전용 표식카드 실시” 문건을 발표, 2008. 2. 1 이후 생산된 제품에 적용

2008. 5. 26	- 재정부와 상무부, “가전하향 정책 지속실시에 관한 통지”를 발표(2008.12.31까지 연장)
2008. 10. 16	- 재정부와 상무부 “가전하향 추진 방안”을 발표: 대상 지역을 시범 3개 성에서 14개의 성과 도시로 확대, 해당 제품에 세탁기를 추가
2008. 11. 30	- 공업·정보화부, 재정부, 상무부, 북경에서 열린 “가전하향공작 전국 추진 회의”에서 시범지역을 2008.12.1부터 12개 성과 2개 도시(靑島, 大連)로 확대
2008. 12. 24	-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유통 활성화, 소비 확대, 대외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에 대하여 논의 - 농촌 유통 네트워크의 발전과 제품 종류를 확대하여 가전하향을 강화
2008. 12. 31	- 국무원 , 《유통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에 관한 의견》 발표: 2009.2.1부터 가전하향 정책의 전국 실시(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4년간 시행), 오토바이, 컴퓨터, 온수기, 에어컨 등으로 해당 제품 확대
2009. 2. 1	- 가전하향 전국 시행
2009. 2. 19	- 전자렌즈, 전자조리기도 가전하향정책 보조금 대상에 추가, 가구당 제품 구매 제한 1대에서 2대로 확대

2. 가전하향(家電下乡) 정책의 경과 및 주요 내용

가. 가전하향의 시범 시행

- 중국은 농촌의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농업비중이 높고 인구가 많은 3개 성(산둥, 허난, 쓰촨)의 농민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
 - 가전하향에 해당되는 가전제품을 구매한 농민은 정부로부터 상품 판매가의 13%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, 이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(성)가 각각 80%와 20%를 부담
 - 가전하향의 해당 가전제품은 컬러 TV, 냉장고, 휴대폰으로 각각의 판매가격은 1,500위안, 2,000위안, 1,000위안을 넘을 수 없는 가격상한제가 적용
- 첫 시범 시행 지역인 허난, 쓰촨, 산둥의 농촌 가전판매가 약 30% 증가했지만 총 매출액이 약 40만 위안으로 정부가 예상한 100억 위안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평가
 - 귀진증권(国金证券)은 《2009년 중국가전산업의 리스크 평가》에서 비록 가전하향이 가전수요의 성장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 효과는 정부에서 예상한 것처럼 낙관적

이지 않았다고 언급

나. 가전하향의 확대 시행

□ 국무원 상무회의(2008.11.19)에서 경공업과 방직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6개 항목 정책 조치를 확정하고 가전하향 정책을 2009년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

- 가전하향 해당 제품에 오토바이, 컴퓨터, 온수기(태양열, 가스, 전력 등을 포함)와 에어컨을 새로 추가

- 보조금 규모는 2008년 90억 위안에서 약 200억 위안으로 확대

·상무부 종합부(綜合司) 리우하이취엔(劉海泉) 부장(司長)은 이를 통해 약 1,500억 위안의 농촌소비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

□ 국무원 제 51차 상무회의(2009.2.19)에서 가전하향의 확대 실시를 강화

- 가전하향 해당 제품에 농민의 구매 의사가 비교적 높은 전자렌즈와 전기조리기를 추가

- 제품 구매에 대하여 한 가구당 동종 제품에 대하여 1대에서 2대를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다고 조정

- 5개 소수민족 자치구와 지진지역인 쓰촨성(四川省) 원촨(汶川)시의 51개 현에 대한 보조금은 중앙 재정이 전액 부담

- 보조금 지급 절차와 상품 공개입찰 방식을 간소화

·가전제품은 교환이 빠르다는 특징에 따라 1년에 1번 공개입찰하고, 휴대폰 등의 제품은

반년을 주기로 공개입찰 진행이 가능

□ 가전하향에 참여할 생산·판매·유통 기업이 확대

- 가전하향 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컬러 TV, 냉장고, 휴대폰, 세탁기에는 163개 생산기업의 2,851개 모델과 139개 유통기업이 확정
- 각 제품의 모델은 각각 컬러 TV 224개, 냉장고 1298개, 휴대폰 356개, 세탁기 913개
- 지금까지 전국에 등록된 판매망은 83,197개로, 이 가운데 2008년 12월부터 실시된 12개의 성에 이미 등록된 판매점은 59,405개이며 이 12개 성의 1,713개 현급(县级) 행정구역에 근거하여 추산하면 각 현(县)의 평균 판매점은 34개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

다. 가전하향 확대 시행의 의미

□ 가전하향의 확대 시행(가전하향의 전국적 시행)은 농촌의 소비확대, 산업발전 추진, 민생 개선, 에너지 절약 및 배기량 감소, 농촌 생산과 유통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는데 의의가 있음.

- 농촌의 내수 확대는 국내 수요 확대의 중심으로 농촌의 잠재된 소비수요를 현실 구매력으로 전환하여 내수를 확대할 수 있음.

가전하향 정책을 통해 농민들은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, 특히 농촌에 보급된 컬러 TV와 휴대폰은 농민이 다양한 시장 정보와 생산 기술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고 농민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는데 기여

-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가전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컬러 TV, 냉장고, 세탁기, 휴대폰의 생산량이 세계 1위이며 수출 의존도가 큼.

- 가전하향 시행은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수출과 가전산업 발전의 난관을 극복하는 계기의 하나로 작용
- 지속가능 발전 강화를 위해 가전하향 해당 제품 기준에서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였으므로 “에너지 절약과 배기량 감소” 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기대
- 온라인을 통한 가전하향(전자상점하향:网店下乡)은 가전하향 정책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내수확대의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
- 징동상점(京东商城)은 상무부가 정식 승인한 첫 가전하향 전자상점으로 북경지역에 한하여 가전하향의 조건에 부합한 소비자가 징동 전자상점에서 가전하향 해당 제품을 구입 시 13%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.
- CNNIC(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)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, 2008년 말 중국 인터넷 이용 고객은 2.98억 명으로 2007년 동기 대비 8,800만 명 증가
- 이 가운데 중국 농촌 이용객 규모가 8,460만 명(전년 동기 대비 3,190만명 증가)에 이 름.
- 광둥 유통협회의 한 관계자는 농민의 입장에서 값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전자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어 더욱 큰 소비층을 확보할 수 있으나, 상대적으로 아직 열악한 농촌의 환경을 감안한다면 유통회사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.

3. 가전하향 정책의 문제점

가. 판매상들의 손해 발생

- 가전하향 제품의 판매상 일부는 가전하향 해당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이윤이 높지 않다는

불만을 제기

- 이에 따라 일부 판매상들이 가전하향 제품 전용 표식카드를 숨기고 시장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
- 이에 대해 일부 중간 대리 유통업체의 고수익 추구하고 부족한 판매점이 문제라는 지적
 - 충청시의 “가전하향 공작지도자 소그룹”의 한 관계자는 생산업체의 도매가가 높고, 일부 중간 대리 유통업체의 이윤이 지나치게 큰 것이 문제라고 지적
 -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기업들이 자신의 판매망을 구축하고 점차 중간 대리점을 축소할 것을 건의

나. 보조금 지급 및 수취의 어려움

- 재정상태가 어려운 일부 지역에서 보조금 지급을 미루는 현상이 발생
 - 산동성 지양현(济阳县)의 한 진(镇)은 가전하향 정책 시행 시 보조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졌지만, 점차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
- 산동성 경제무역 위원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가전하향의 보조금 지급은 재정부가 연초에 관련 예산을 성에 집행하고, 초과예산이 발생하면 지방재정이 대신하여 부담한 후, 연말에 총결산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.
 - 그러나 지방재정이 어려울 경우 대신 부담하는 것 또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
- 보조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며 소규모납세자들의 영수증 발급 문제가 발생
 - 농민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신고서, 제품의 세금영수증 원본 및 복사본, 신분증 원

본 및 복사본, 보조금 제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및 전용 표식카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향(乡)재정에서 신청하고 현(县)재정에서 수취

- 이는 해당 제품의 구입과 보조금 수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- 이에 상무부 천더밍(陈德铭) 부장은 재정부와 함께 가전하향 보조금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민이 보조금을 받는데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.

다. 가짜 하향 제품의 유통

- 중고제품을 수리한 이후 이를 농민들에게 가전하향 제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
- 이에 중국질량인증중심(质量认证中心)은 가전하향 제품에 대하여 철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관련기업에 대하여 감독 관리를 엄격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

라. 한도가격보다 높은 가전하향 제품으로 인한 피해

- 가전하향 제품을 농민들이 최종 구입하기까지 많은 유통과정을 거침으로써 결국 최종 판매가격이 최고 한도가격보다 높아 농민들의 이익을 침해기도 함.
- 가전하향 공개 입찰 최고한도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판매상의 불법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.
- 이와 관련 상무부와 기타 관련 부문은 가전하향 정책이 농민, 기업,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효율적인 관리 세칙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힘.

4. 가전하향 정책 개선에 대한 제안

- 가전하향 정책 시행에 대해 중국 내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다음과 같이 제기
-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가전하향의 대상이 일부 농민에서 도시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
 - 이들은 현재 시행 중인 가전하향 정책이 일부 부농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, 구매력이 없는 빈농은 물론 도시 저소득층에게도 가전하향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
 - 또한 현행 가전하향 정책이 호적 소재지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 역시 가전하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다고 지적
- 가전하향 정책에 해당하는 제품의 범위, 구매 가능한 제품의 수량 한도 확대 및 최고한도가격의 인상 등이 필요
 - 가전하향 해당제품을 실용적 생활가전용품인 전기밥솥, 전기프라이팬, 전기면도기, 전기선풍기 등으로 확대하여 가전소비를 제고
 - 각 제품에 대한 가구당 구매 수량을 2대로 한정하기 보다는 가족 구성원 규모를 감안하여 실제 수요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수정
 - 가전하향 제품의 최고한도가격을 적절히 인상하여 보다 많은 중가 제품의 소비가 이루어져야 함.
- 복잡한 보조금 지급 절차의 간소화
 - 가전하향 제품에 대한 보조금은 보통 농업은행을 통해 지급이 되고 있으나, 향진(乡镇)에는 농업은행 영업점이 없는 실정
 - 농민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현성(县城:군청소재지)에 가서 구좌를 개설하고 진(镇) 재정

에서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농민은 다시 현성(县城)으로 가야만 보조금을 찾을 수 있음.

- 이같은 복잡한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진(镇)과 촌(村)에도 많이 있는 농촌 신용협작사(农村信用合作社)를 늘릴 것을 건의

□ 가전하향 제품 사용 관련 환경 개선의 필요성

- 많은 농촌지역이 전력 부족으로 가전을 구입하고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의 전기 사용량 확보, 전기료 인하, 기타 농촌 인프라 구축(수도, 전기, 가스, 통신 네트워크) 등이 필요

〈참고 자료〉

- 《新华网》, “在线零售商360buy京东商城首获家电下乡牌照 运费全免”, 2009.2.25
- 《中国经济网》, “商务部:2009年家电下乡财政补贴预算200亿”, 2009.2.28
- 《新华网》, “商务部部长陈德铭:简化家电下乡补贴手续”, 2009.3.3
- 《(小康)杂志》, “政协委员建议家电下乡应借鉴消费券模式”, 2009.3.3
- 《中国网》, “家电下乡免征增值税和改变补贴兑付方式的建议”, 2009.3.3
- 《中国经济网》, “王填:建议调整家电下乡补贴方式”, 2009.3.3
- 《广州日报》, “苏宁张近东:建议家电下乡纳入低保家庭”, 2009.3.4
- 《第一财经日报》, “李东生:家电下乡彩电限价提高至3000元”, 2009.3.4
- 《新京报》, “质量认证中心将对家电下乡产品进行市场核查”, 2009.3.4
- 《新华网》, “杨绵绵代表:建议简化家电下乡补贴流程”, 2009.3.7
- 《中财网》, “杨绵绵代表建议尽快完善家电下乡配套设施”, 2009.3.9
- 《第一财经日报》, “董明珠建议家电下乡补贴应改消费券”, 2009.3.10

(자료 정리: 중국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박사과정 신금미)